

충남연구원「열린충남」2024년 통권 106호
국제연속표준간행물 [ISSN] 1226-637X 비매품

Vol. 106
2024
AUTUMN

열린 충남

권두언

ESG 행정화 “충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특 집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 통과와 기업경영에서의 실사의 이해
ESG 국내 및 국제 정세, 변화양상
충남도정의 SDGs 정책 및 방향

현안연구

서울시 골드시티 주택공급과 연계한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밀라노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 밀라노 2030 계획과 밀라노 시티라이프

권두언

- 04 **ESG 행정화 “충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이치한 | ESG 행복경제연구소장

특집

- 07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 통과와 기업경영에서의 실사의 이해**
이선경 | 충청남도 ESG위원회 위원, 그린에토스랩 대표
ESG 국내 및 국제 정세, 변화양상
박범준 | 건양대학교 ESG연구원 교수
충남도정의 SDGs 정책 및 방향
홍순만 |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현안연구

- 27 **서울시 골드시티 주택공급과 연계한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임준홍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혜선 | 충청남도 지역활성화투자사업팀장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김용현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밀라노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 밀라노 2030 계획과 밀라노 시티라이프
제수진 | 충남연구원 연구원
이관률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홍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마당

- 42 **여성가족부 폐지 자장(磁場) 속 충남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 변화와 우려**
이선화 |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언론이 바라본 충남

- 49 **스마트 축산단지와 청양 지천댐**
권혁조 | 충청투데이 기자

로컬이 답이다

- 52 **충남의 대표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주)로컬몬스터**
이재영 | (주)로컬몬스터 대표

연구원 소식

- 58 **“충청남도, K-국방의 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할 터”**
충남연구원, KTX공주역 활성화 토론회 열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성료
충남도 스마트팜 R&D 및 산업 육성 전략 모색

스마트폰으로도
[열린충남]을
만나보세요



2024 AUTUMN Vol. 106



발행일 2024년 9월 발행인 오용준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오용준 편집위원 백운성, 김양중, 김영일, 오혜정, 유학열, 이훈택, 김진수 에디터 정봉희, 김선영
주소 우)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홍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www.cni.re.kr 편집제작 천안인쇄주식회사

· 문의사항은 goforit@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이치한 —

ESG 행정화

“충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2004년 등장한 ESG의 뉴노멀 현상이 사회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 선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유럽 그린딜 정책화’ 및 ‘코로나 팬데믹’ 등이 기폭제가 되어,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성찰과 담론이 ESG를 중심으로 ‘실천적 합의’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친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경영(Governance)을 지향하는 ESG가 ‘지구 온난화의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의 자본주의의 위기’에 직면해, 국가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당면현안과 핵심과제로 급부상한 상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 및 규제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ESG 본격화는 그 강도와 속도를 더해가는 추세다.

우리 정부도 ESG 확산에 ‘탄소중립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K-택소노미’, ‘K-ESG 가이드라인’, ‘ESG 정보공개 로드맵’ 발표 및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다수 ESG 핵심사업 추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2년 7월 격상하여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치한 |

ESG 행복경제연구소장

이제 ESG라는 시대적 명제가 국민과의 최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대응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ESG 관점에서 행정전반의 방향성이 사회공동체와의 사회적 맥락을 같이 해야하는 당위성이 더욱 높아졌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ESG를 공공정책의 한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조직화 및 전문인력 확충, 주민의 능동적 참여유도, 자원조례 제정 등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여러 측면에서 지방정부의 ESG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정책적 제도화가 요구됨에 따라,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들이 ESG와 연계한 통합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ESG는 밀접하게 맞닿아있다. SDGs는 ESG가 다루는 환경, 사회, 경제 분야의 과제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기에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ESG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SDGs 추진의 주체가 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중심이라면, ESG경영의 주체는 기업일 뿐이다. 하지만 ESG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은 되더라도, SDGs와 ESG를 추진하는 주체와 적용하는 상황만이 그저 다를 뿐이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의미와 본질은 같다. SDGs와 ESG의 지향점에 대한 그 기초만큼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ESG의 영역인 환경적, 사회적 책임은 지방정부의 공적기능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때문에 정부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ESG 경영으로의 체제전환 요구는 다르지 않다. 지방정부가 경영하는 행정에도 ESG 원칙의 적용 가능성이 크고, 기획적인 측면도 강하다. 더구나 지방정부는 '지방소멸위기' 직면과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ESG 기반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이라는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차원에서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비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충남은 지속가능발전 시책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위원회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고 있다. 특히, 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17개 목표, 62개 지표, 242개 단위 사업으로 구성·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년마다 전략과 추진계획 실적을 점검하며, 지속가능발전을 도정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ESG는 SDGs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에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ESG는 SDGs 달성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실행주체인 지방정부에게 중요한 정책적 수단인 셈이다. 주요 정책적 방향이 ESG와 SDGs를 결합한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극대화하는데 최적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도정전반이 기존의 행정서비스 수준에서 벗어나, ESG가 체화된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이슈별 정책대응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ESG 중심의 포괄적 중장기적인 정책전환이 강조된다. 이러한 기초하에 탄소중립, 저출산, 저성장, 정주여건 개선 등의 문제해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정책사업의 기획 및 개발단계부터 ESG를 핵심사항으로 놓고 환경과 사회 등이 이해관계자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행정의 이해관계자인 기업, 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민·관협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중요한 대목이다. 이를 위해 "ESG 적용을 왜 해야 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감대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로써 ESG 핵심가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상호 균형발전)와 일체화된 비전의 '목표 구체화'를 설정 할 수 있다.

ESG 도정방향 설정은 공공과 민간이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환경지표'를 행정전반에 적용하며, 기후위기에 '기후테크'로 대응하듯이 ESG 요소를 기회로 활용하는 '역량 증진형' 사회기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부문에서는 ESG 추진의 자발적인 환경조성과 우수기업 우대 등으로 'ESG 생태계의 선순환적 구조화'를 촉진하는데 행정이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결국 환경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주요 정책을 SDGs로 대분류하고, 다시 ESG 항목으로 변환하여 통합하는 "충남형 ESG 행정체제" 구축은 필연적이다. 더불어 포용적 참여형 지원형 ESG 거버넌스를 위해 그에 걸맞은 Facilitator(촉진자), Moderator(중재자), Expert(전문가)로서의 행정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ESG 기반이 확충되어야 '지속가능 중대성 주제'의 정책적 통합을 통해 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정책의제 발굴과 사업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SG가 오늘날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ESG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지역 특성화(Only One)' 및 '차별적 우위의 경쟁력(Killer Contents)'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행정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여기에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상생' 강화는 필수적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도전과 움직임이 ESG로 수렴되는 시대다. 지속가능발전에 새로운 기회 발굴이 ESG 행정의 일환인 것이다. 충남의 지속가능성장과 지역특성화를 뒷받침하는 전향적인 ESG 행정화가 속도를 내야할 때다. ESG 시대를 맞아, 충남의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기대하며 응원한다.

특 집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 통과와 기업경영에서의 실사의 이해
ESG 국내 및 국제 정세, 변화양상
충남도정의 SDGs 정책 및 방향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 통과와 기업경영에서의 실사의 이해

이선경 | 충청남도 ESG위원회 위원·그린에토스랩 대표

유럽 공급망 실사 지침 통과와 의미

2024년 4월 수년간 논의되어 온 유럽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최종적으로 유럽 의회를 통과하였다. 2023.12.14일 EU의회와 이사회가 잠정합의하고 2024년 2월 28일 공식승인에 한차례 실패한 후, 최종 통과된 공급망실사지침은 원안대비 적용 대상이 크게 축소되고 실사의 범위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유럽 전역에 걸쳐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표준화하고 이를 의무화해 회원국들은 이에 따른 국내법을 제정하게 되며, 유럽 역내 기업 뿐 만 아니라 역외 기업으로 유럽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가진 기업도 직접적인 의무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예상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지침의 직접적인 의무 대상은 아니나, 직접 의무대상자인 기업들과의 거래관계를 통해 의무대상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실사를 받아야 하는 피대상자로 영향을 받게된다. 공급망 실사지침에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거래관계를 종료하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으므로, 공급망 실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기업의 규모를 떠나 기업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공급망(Supply Chain)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소비, 폐기의 전단계를 일컫는 말로, 원자재 추출에서 공급, 제조, 유통, 물류, 소매, 그리고 최종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가 포함된다. 이러한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여러 공급자와 파트너가 참여함으로 공급망은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실사(Due Diligence)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관련된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검토한다는

의미로 실사의 목적에 따라 결정된 항목에 대해 대상 항목이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법적 및 윤리적 기준, 재무기준 등 다양한 기준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과정이다.

지구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재산상 손실은 물론 대규모 인명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선진국에서 소비되는 값싼 재화의 생산을 위해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불법적이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형태의 노동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제 노동기구(ILO)와 UN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업들이 그들의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노동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권고하는 지침을 발표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들이 인권, 환경,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로서 공급망 실사지침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지침은 기업들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철저한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한다.

유럽 공급망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

유럽의 공급망 실사 지침은 역내와 역외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최소 연 1회 이상의 실사의 의무를 부과한다. 실사 대상인 밸류체인의 범위는 당초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활동 전반으로 매우 광범위했으나, 현실적으로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는 반대에 의해 다운스트림 내 간접적인 파트너와 제품 폐기단계에서의 활동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실사 직접 의무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업스트림의 파트너와 다운스트림의 직접 파트너사가 주요 피실사 대상이 된다.

2027년, 유럽 역내에 위치한 직원 수 5천명 이상에 연매출 15억 유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적용을 시작으로 2028년, 2029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실사의무를 위반한 기업은 연결기준 매출의 5%를 벌금으로 낼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민사 소송을 제소 당할 수도 있다.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 적용대상

구분		범위 (모두 충족)	비고
역내	대기업	① 근로자 1,000명 초과 ② 글로벌 연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 직원 수 5,000명 이상 및 매출 €1.5b : 3년 내 준수 · 직원 수 3,000명 이상 및 매출 € 900m : 4년 내 준수 · 직원 수 1,000명 이상 및 매출 € 450m : 5년 내 준수
	역외	대기업	① EU 내 연간 순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만 적용 · 역외기업은 직원수 기준 제외한 매출기준 단계적 적용, 프랜차이즈 기업은 5년 내 준수
그 외 기업		지침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지분 또는 계약 형태로 연계된 대기업 협력업체의 경우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됨	

출처 : 유럽의회

유럽 공급망 실사지침의 주요 실사항목은 크게 인권과 환경오염으로 구분된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지침은 인권과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하며, 산업안전은 노동자 권리 보호의 일환으로 포함된다. 기업들은 이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인권 침해와 환경적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산업안전은 직접적인 독립 항목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작업 환경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다루어진다.

유럽공급망 실사 주요 실사 항목

실사 항목	주요 내용
인권	-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위반 사항 - 강제노동, 아동노동, 인신매매, 임금착취,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에 제약을 가하거나 불필요한 간섭 등의 일체의 활동(평판, 종교, 사생활, 통신 등에 대한 간섭이나 제약 등)
환경오염	- 총 12개의 위반사항으로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유해폐기물 등에 관한 국제 환경협약과 긴밀히 연결 - 수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화학물질, 오존층 파괴물질 등의 제조·사용 및 폐기 등에 대한 내용

공급망 실사 시행 절차는 OECD 기업실사지침의 6단계의 과정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그림 참조)

실사 체계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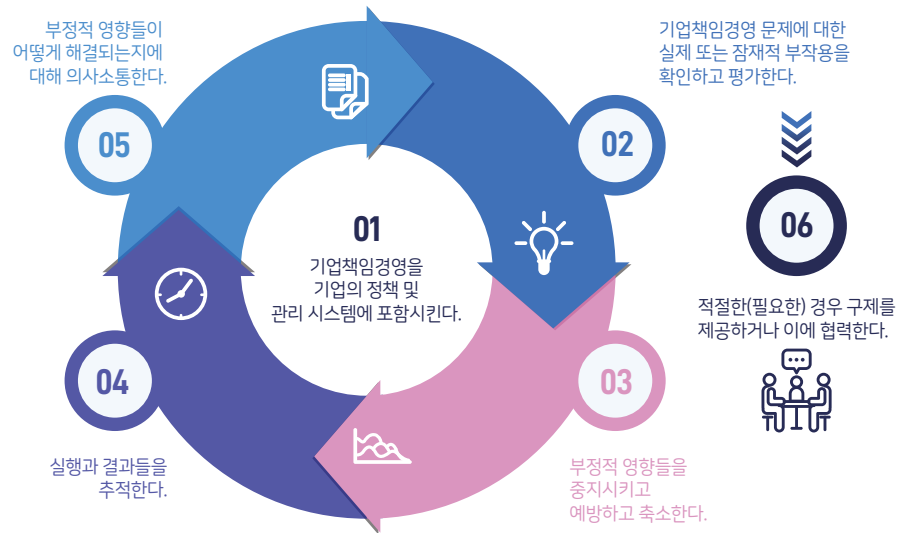
먼저, 예방적인 조치가 사후적 조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이다. 실사는 지속가능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기업이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모니터링해 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실사는 위험에 기반(risk-based)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사의 방법은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 및 가능성에 비례하며, 조치 간의 우선순위도 심각성 및 가능성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위험의 노출도나 가능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실사는 불필요한 비용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목적에 맞는 적절한 수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사활동은 고정된 절차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결과를 분석하고 반영하는 피드백 루프가 중요하다.

한편, 실사는 정부나 기업이 실사를 실행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한 책임을 다른 곳으로 전가하기 위한 것이 여서는 안된다. 즉, 실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실사를 수행하는 기업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쌍방향 의사소통과 시의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 실사의 주체인 기업과 피실사 기업 및 이해관계자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실사를 빌미로 피실사 기업에게 상업적 기밀 등을無理하게 요구해서는 안되며 기타 경쟁 및 보안 문제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기업실사의 과정



출처 : OECD 기업실사지침

유럽의 공급망 실사지침이 아직 본격 시행되지 않았으나, 글로벌 대기업의 다수가 이미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 행동강령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협력사의 선정 및 관리에 이를 반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규협력회사 등록시 환경, 노동, 환경 부분의 주요 항목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현대차그룹은 ESG 평가 결과를 담은 표준계약을 마련하고 이를 체결할 예정으로, ESG경영 수준이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1차 협력업체는 2025년부터 재계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의 신규협력회사 등록 주요 평가항목



- 산업안전, 소방시설, 산업보건, 유해물질, 환경시설 등 22개 조항의 기준을 충족 요구
- 8대 필수 준수 항목 : 소화설비, 위험물 및 폐기물 오폐수 시설 등



- 자발적 근로, 근로시간 준수, 차별금지 등 20개 조항에 대해 의무 현장 점검 실시



- 제품환경 정책, 교육훈련, 유해물질 여부 등 점검
- 삼성전자 에코파트너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 한해 거래

출처 : 삼성전자

독일의 폭스바겐은 2019년부터 '공급 업체 행동 강령' 준수를 폭스바겐과의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명시적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공급 업체에 S-Rating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성 등급(S-Rating)을 매겨 행동 강령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2022 연말까지 자체 공개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전체 주문량의 75%에 해당하는 12,660개 기업에 대한 지속가능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S-Rating은 직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최소 요구 조건 외에도 SAQ 전체에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경우 green S-Rating 획득가능하다.) 폭스바겐은 협력업체에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활용 원재자 사용 및 백분율 정보 제공도 권장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공급망관리 정책

	폭스바겐
환경(E)	· 전체 에너지 사용량(MWh)과 탄소 배출량(scope 1, 2, 3) 정보 요구 · 파리 협약에 기반한 기한별 감축 목표 및 재생에너지 목표 설립 권장 (2050 넷제로) · 재활용 원자재 사용 및 백분율 정보 제공 권장
사회(S)	· 국제노동기구(ILO)의 관행 준수 요구 ·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을 준수하기 위한 인권 시스템 적용 (2022) · 책임 있는 광업과 관련된 IRMA(Initiative for Responsible Mining Assurance) 실사 요구
지배구조(G)	· 협력업체에 경영 윤리, 관리 전략 및 보안과 관련된 사항 준수 요구 · 부패 및 윤리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 진행

출처 : 폭스바겐 공급망 행동강령

유럽의 새로운 공급망 실사지침으로 유럽의 주요 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하거나, 국내 주요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법적 규제가 강화에 따라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실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비단 이러한 법적 의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복잡해지는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공급망 실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책임 강화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이러한 책임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사업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대응보다는 실사를 통해 사전적으로 정의된 위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할 경우 자신의 사업 관행을 조정하거나 개선해야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성공적인 대응은 공급망 평가 체크리스트의 점수나 등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 및 구성원들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응 내재화에 있다 하겠다.

ESG 국내 및 국제 정세, 변화양상

박범준 | 건양대학교 ESG연구원 교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인정받으며, 투자자, 규제 기관, 소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는 중요한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몇 년간 ESG는 기후 변화, 사회적 불평등, 지배구조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와 연관되어 주목받으면서, 이제는 ESG에 대한 생소함의 시기를 지나, 오히려 ESG라는 개념이 대중에게 익숙해지면서 일부에서는 관심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ESG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과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SEC(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 ESG 공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제(SFDR)를 통해 ESG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 또한 자국의 ESG 규제와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2050 탄소 중립 목표와 함께 ESG 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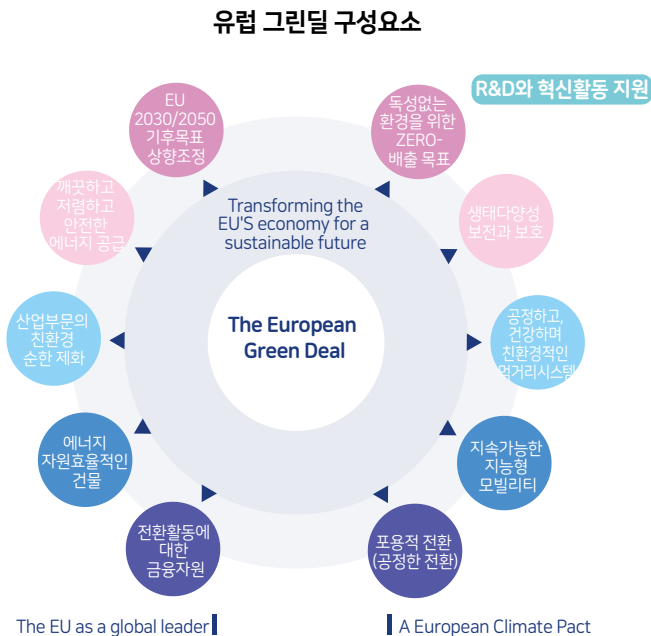
ESG는 이제 도덕적 의무나 규제 준수를 넘어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리스크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ESG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야 하며, 국가 및 기업들은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G의 정의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내 및 국제 정세를 분석하며, ESG 관련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ESG의 글로벌 동향

1. 세계 주요 국가들의 ESG 정책 및 규제

미국은 ESG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ESG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ESG 규제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으며,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과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제(SFDR) 등을 통해 ESG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 그린 딜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며, 자원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 : 최재원(2024) EU 지속가능 관련 규제동향과 기업 대응전략, p.7
(출처 : EU Commission)

지속 가능 금융 공시 규제(SFDR)는 2021년에 시행된 유럽연합의 규제로써, 금융 시장 참가자와 금융 자문사에게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SFDR은 금융상품이 ESG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는지, 관련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에 기반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일본과 중국도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환경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 ESG 관련 글로벌 협약 및 국제기구 활동

유엔(UN)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와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ESG의 기본 틀을 제공하며, 기업과 정부가 ESG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금융공사(IFC),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유엔환경계획(UNEP) 등도 지속 가능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과 국제기구 활동은 기업들이 ESG 전략을 강화하고, 글로벌 지속 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SG관련 글로벌 협약 및 국제기구 활동

구분	내용
유엔(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SDGs)	유엔의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목표를 제시하며, ESG 활동의 지침 역할을 담당함
파리 협정 (Paris Agreement)	파리 협정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한 협정으로, 애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파리 협정의 목표에 맞춰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
국제금융공사 (IFC)	IFC는 그린 본드를 발행하여 친환경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정책을 지원함
세계은행 (World Bank)	'그린 본드'와 같은 지속 가능 금융 상품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며, ESG 투자를 촉진함
국제통화기금 (IMF)	IMF는 기후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 권고를 제공함
국제노동기구 (ILO)	ILO는 ESG의 사회적(S) 요소와 관련된 글로벌 노동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 권리와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함
유엔환경계획 (UNEP)	UNEP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기구로, ESG의 환경(E) 요소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UNFCCC는 파리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함
세계경제포럼(WEF)	WEF는 ESG와 관련된 글로벌 대화를 촉진하고, 기업과 정부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통합하도록 지원함

국내 ESG 정세

1. 정부의 ESG 정책 강화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ESG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부터 ESG 정보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2025년까지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이 ESG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친환경 산업 육성과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이 ESG 경영을 강화하고,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기업들의 ESG 경영 강화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글로벌 ESG 트렌드에 발맞춰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LG화학은 친환경 소재 개발 및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 및 수소차 개발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자 신뢰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3. 금융기관의 ESG 투자 확대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부터 전체 운용 자산의 50%를 ESG 요소를 고려한 투자로 확대하고 있으며, 주요 금융기관들은 ESG 펀드, 그린 본드 등 지속 가능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KRX)는 ESG 평가 지수와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제공하여 ESG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국제 ESG 변화 양상과 비교

국제적으로 ESG는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ESG의 개념적 접근과 평가 기준 및 방법론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ESG 1.0에서 ESG 2.0으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의 변화가 있다. ESG 1.0은 기업이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조직 및 경영지표로 내재화하는 초기 단계였다면, ESG 2.0은 ESG 경영이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는 시기로, 기업 간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ESG를 투자로 인식하며, 특히 사회(S)와 지배구조(G)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ESG 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데이터와 기술의 활용이다. MSCI는 2020년에 AI(인공지능)와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ESG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공개된 보고서, 뉴스 기사,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분석하여 ESG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글로벌 ESG 평가 기관들은 각국의 상황에 맞춘 ESG 지표와 평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ESG의 개념 변화

구분	ESG 1.0	ESG 2.0
단계	ESG 개념 이해와 체계 구축, 목표 선언 단계 (방어적/소극적 ESG 경영)	본격적 ESG 투자와 비즈니스 전환 단계 (진취적/선제적 ESG 경영)
특징	· ESG 투자자본이 주도 · ESG를 하지 않으면 위기라고 인식 · ESG 중 E에 편중 · 탄소배출량 Scope 1,2 단계 관리 · 소극적 공시(기업 자율에 맡김) · 형식적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 ESG 예산을 비용으로 인식(소극적 집행) · 경영진/이사회 ESG 이해도가 낮음 · ESG전담 부서 신설(기존 CSR 부서)	· 기업 경영진이 ESG 주도권에 다가감 · ESG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 · ESG 중 S와 G의 중요성이 커지고 E는 범위 확대 · 탄소배출량 Scope 1,2,3 단계 모두 관리 · 체계적 공시 시스템 구축(권고→필수 추세) · 실질적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 ESG 예산을 장기 투자로 인식(적극적 집행) · 경영진/이사회가 ESG를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 · ESG 부서의 위상과 영향력 증대

자료 : ESG 2.0 유진투자증권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가 국내외에서 중요한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ESG 정세는 정부의 정책 강화, 기업들의 ESG 경영 전략 도입, 금융기관의 지속 가능 금융 확대 등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ESG는 단순히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장기적인 재무 성과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ESG의 확산과 더불어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실제 ESG 성과는 낮으면서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높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평판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ESG 성과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규제 당국은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들 역시 ESG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이해하고, 그린워싱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의 ESG 평가와 경영 전략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며, 글로벌 기준을 반영한 표준화된 평가 방법론과 데이터 기반의 ESG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ESG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금융위원회. (2021). ESG 공시 의무화 계획.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 자료.

LG화학. (2023). 탄소 중립 목표 및 친환경 소재 개발 전략. LG화학.

MSCI.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in ESG Ratings. MSCI ESG Ratings

Report.

국민연금공단. (2023). ESG 투자 확대 계획 발표. 국민연금공단.

삼성전자. (2023). 2023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삼성전자.

유진투자증권. (2023). ESG 2.0 개념 변화.

최재원. (2024). EU 지속가능 관련 규제동향과 기업 대응전략.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KRX). (2022). ESG 정보 공시 지침.

European Commission. (2021). Sustainable Finance and EU Taxonomy. Retrieved from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_en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2021). ESG Standards and Disclosure: A Guide for Companies. Retrieved from https://www.ifc.org/wps/wcm/connect/topics_ext_content/ifc_external_corporate_site/sustainability-at-ifc

United Nations.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2022). Proposed Rule : The Enhancement and Standardization of Climate-Related Disclosures for Investors. Retrieved from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22-46>

Kim, S., & Park, J. (2021). The Impact of ESG on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 Evidence from Korea. Journal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15(2), 101-120.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CFD). (2017).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OECD. (2020). Corporate Governance and Sustainability.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orld Economic Forum (WEF). (2023). Annual Meeting 2023 : ES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Discussions. Retrieved from <https://www.weforum.org/events/world-economic-forum-annual-meeting-2023>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2023). Climate Change and Financial Stability : IMF's Role in Promoting ESG Integration.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n/Topics/climate-chang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2022). The Paris Agreement : Essential Elements. Retrieved from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the-paris-agreement/the-paris-agreemen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2).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corporate/principles-corporate-governance.htm>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2022). Global Labour Standards and Social Responsibility. Retrieved from <https://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2023). Green Economy Initiativ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trieved from <https://www.unep.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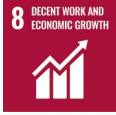
충남도정의 SDGs 정책 및 방향

홍순만 | 충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SDG의 개념과 목표

서구권을 중심으로 '60~'70년대부터 인간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과도한 개발이 오히려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함께 개발과 대립적 관점에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 2015년 9월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제적, 국가적, 지방적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였다. UN총회에서 제시한 17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UN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SDGs)

 1. 빈곤의 해소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2. 기아의 종식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
 3. 건강과 복지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세대의 복지를 증진	 4. 양질의 교육 모두를 위한 포용적,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학습 기회 증진
 5. 성평등 성평등을 달성하고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	 6.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 확보,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신뢰성 있는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접근 보장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지속적, 포괄적,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9. 혁신과 인프라 구축 복원력 있는 인프라 구축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10. 불평등 완화 국가내, 국가 간 불평등을 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안전한 인간거주지 조성	 12.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모두를 위한 식수 및 위생시설의 접근성 확보,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13. 기후행동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행동 시행	 14. 해양 생태계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바다, 해양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
 15. 육상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호, 복원, 증진, 관리, 사막화 방지 등	 16. 평화, 정의 및 제도구축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증진, 모두에게 정의보장, 포용적 제도 구축
 17. 목표 달성을 위한 파트너십 이행수단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존, 정의와 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은 주로 환경보존과 경제개발 간 조화의 문제를 접근했으나 90년대 이후 사회정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했다. 이는 경제발전과 사회정의, 환경보존의 균형을 통해 현재-미래, 인간-자연, 인간-인간의 조화로운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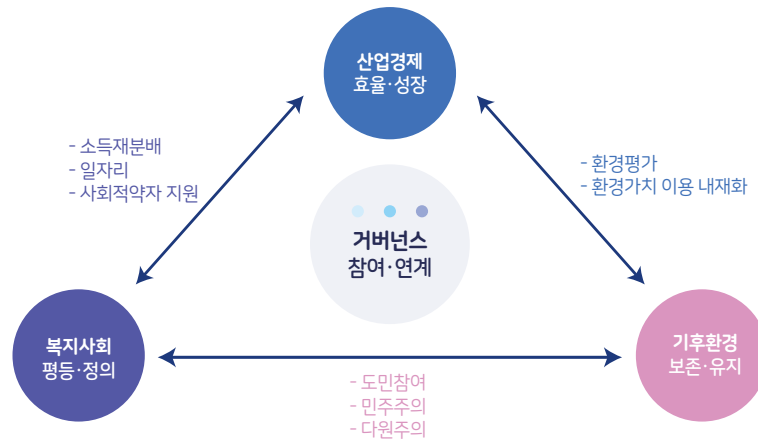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와 협력체계

정부는 2000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했으며 5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하고 2년 단위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평가한다. 또한, 계획의 수립, 변경, 협의, 조정, 평가 등 기능을 갖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다가 2010년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전환하였다.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17개 SDGs 목표에 대한 231개 세부지표를 심사한 결과 최종 62개 실천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2018년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 9SDGs) 2030 장기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실천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8~2020년 1단계, 2025년까지 2단계, 2030년까지 3단계로 이행계획을 구분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도의 각종 중장기 계획에 연계사업으로 반영하였다.

충청남도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은 산업경제, 복지사회, 기후환경의 각 분야에 대한 현재와 미래세대의 공존에 있다. 그러면서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사업의 발굴과 연계, 도민의 적극적 도전과 참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균형있는 성장을 목표로 한다.

충청남도의 SDGs 지향 목표



SDGs 17개목표와 62개 세부지표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관·산·학·연의 추진체계도 내실 있게 구축했다.

충청남도 추진체계 및 주요기능

기능	조직구성	주요기능
총괄	도 기획관실	· 62개 세부지표 사업계획 수립 및 이행총괄
이행	실·국	· 지표관리 및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심의 평가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	· 경제, 환경, 사회 3개 분과로 구성된 상설조직 · 분야별 부서장,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참여
실행(행동)	충청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산업경제, 복지사회, 기후환경, 미래세대 4개분과 · 교수, 유관기관 및 단체, 전문가, 활동가 등 참여하는 실행조직이며 상설조직 ·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 관련부서 이첩 → 검토 → 업무개선 등 선순환적 사후관리
연계협력	도, 시 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도 지속협과 연계협력 사업 추진 · 도의 연계 또는 시군 자체 SDGs 세부지표 사업 실행 (행동) 추진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방향

충청남도는 UN의 지속가능목표를 지역의 실정과 여건, 현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남형 SDGs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합하도록 목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 17개 SDGs 목표의 1단계 사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G1. 빈곤의 해소

산업화를 거치면서 절대빈곤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IMF와 세계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상대적 빈곤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①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빈곤선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도민의 1/4에 해당)의 도민이 없도록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층에 대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②적극적 사회복지 투자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2015년 30%인 복지재정을 2030년 43.9%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누수 없는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G2. 친환경 농업과 먹거리

농업시장의 세계화, 개방화로 값싼 외국 농산물이 수입됨에 따라 농업의 질적(친환경) 생산성을 향상시켜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도시화에 따라 침체된 농촌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①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 생산기술 보급 및 인증검사비 지원과 유기농·무농약·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법을 확대 보급하고 ②AI, 구제역 등 빈번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축산물에 대한 신뢰가 저하됨에 따라 친환경적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③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 및 조직출하 확대, 대규모 스마트팜 보급확대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과 ④농촌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생태적, 문화적 기능을 주민이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G3. 건강과 웰빙

보건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른 사회문제(만성질환, 치매 등)에 대응하고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체육, 여가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①만성질환 예방, 건강검진 활성화, 금연환경 조성 등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맞춤형 치매관리를 위해 치매 조기검진과 주간보호소 운영, 치매안심센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③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자살고위험군 관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고 ④도민들의 심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시설 접근성 확대사업과 ⑤다양한 여가생활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활동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수요자 맞춤형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G4. 양질의 교육

우리나라는 초·중·고 및 대학진학률까지 매우 높아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충청남도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관점에서 공평한 보육과 다양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①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민간 가정어린이집 관리 강화와 ②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③도민의

학습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G5. 성평등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144개 국가 중 118위(2017년 기준)에 머물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성평등 구현을 목표로 ①여성의 경제 사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 창업지원, 고충상담, 성별고용 지표를 관리하고 ②우수여성공무원 우대임용, 공공기관 위원회 성비 유지 관리(여성 40% 이상)와 ③폭력예방교육, 재발방지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보호시설 지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④공공부문 육아분담 성평등 강화, 민간부문 가족친화 문화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6. 효율적인 물 관리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화 등으로 물압박(water stress)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수자원인 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①하수처리, 빗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②일상생활에 소요되는 물절약을 위해 수도요금 현실화, 절수기 보급, 교육 및 홍보사업과 ③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하수 총량관리제, 수질오염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④소하천의 자연회복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가축분뇨 유입차단 등 지속가능한 물자원 관리를 위한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G7. 지속가능한 에너지

화력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역차원의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 및 수급체계 전환을 위해 ①지역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고효율 에너지 기자제 사용 확대, 공공기관 에너지 전환사업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점차 개선하고 ②자가생산 소비 지원,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G8. 경제성장과 일자리

지역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와 고용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①충남 GRDP('15년 4,873→'30년 7,057만원)의 지속적, 안정적 유지를 위한 투자유치와 지역 대표산업을 육성하여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②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구축, 취약계층 직접일자리 제공, 일자리 재단 설립으로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15년 62.4%→'30년 70%)을 높이고 ③고착화된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기업-대학간 일자리정보 공유, 창업공간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지원 등 청년취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④비정규직 양산 억제정책과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⑤일 가정 양립을 위해 고용보조금 지급 및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⑥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G9. 산업혁신과 인프라

사회기반시설, 대기업 부문은 상당한 수준이나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기업(종사자 90%, 생산액 50%) 및 지역상권 활성화, R&D를 통한 미래산업 발굴을 위해 ①지역산업 생태계의 균형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밀착 투자형금융지원과 ②소상공인 자금 컨설팅 마케팅 지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③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질적 향상을 위해 R&D 직접지구 조성, 4차산업 대비 미래성장분야 R&D 과제발굴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G10. 불평등 완화

지역내 북부권과 남부권 간 균형발전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①저발전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성장동력사업 발굴지원, 시·군 연계 생활권 선도사업, 낙후지역 기본주거환경 정비지원과 ②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중점관리를 위해 인권교육 및 문화확산, 인권공론화 강화와 다문화가족, 학교밖 청소년, 외국인 주민 등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여 권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우리나라 도시거주 인구는 90%(충남 71%, '16년)를 넘는 상황으로 주거복지, 정주 환경, 교통서비스 및 공동체의 통합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①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공적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취약 계층의 주택보수, 주거급여 등 지원과 ②다양한 범죄예방을 위해 치안협의회 운영, CCTV 설치, 조명, 비상벨 등 확대 설치와 ③도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119구급차 적시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과 닥터헬기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④사회적 약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저상버스 운영과 ⑤교통사고 발생 억제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 안정장치 보급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⑥지역공동체의 참여와 연대성 강화를 위한 참여형 자원봉사, 동네자치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12.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효율적인 자원활용과 순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①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학교 기업 공급확대,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지역농수축산물의 선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②쓰레기 발생 억제와 자원순환을 위해 친환경 소각시설, 선별 수거시설 확충과 자원순환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③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촉진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G13.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①신재생 에너지 주택 및 미니태양광 보급과 조사료생산,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②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관리권역 지정, 오염물질 저감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와 ③급경사지 또는 하천정비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14. 해양자원의 보전

연안하구 생태계 복원과 관리, 해양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①연안환경 모니터링, 오염퇴적물 준설,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추진과 ②단한하구 복원사업 등 생태계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③해양생물 서식지의 체계적 보호를 통한 서식환경 조성과 어민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G15. 육지생태계 보전

산림의 재해예방, 탄소흡수원, 담수공급, 동식물 서식지 등 고유기능 확보와 산림면적 유지를 위해 ①생물다양성 측면의 자연보호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②산림재해 방지, 산림자원 육성,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과 ③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실태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G16. 책임있는 행정제도

법치확립과 부패방지, 투명하고 참여지향적 사회제도 구축을 목표로 ① 투명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사전공표제, 공개심의제, 긴급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②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전컨설팅 감사제와 도민감사관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③행정의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총남민·관협치회를 운영하고 정책숙의체계와 도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고 있다.

G17. 파트너십

충남 SDGs 2030의 실질적 실행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①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마련과 함께 참여주체의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②해외 지방정부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황해포럼, 동아시아 3농포럼 등 국제사회의 주도적 역할 뿐만 아니라 도민참여형 교류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충청남도의 SDGs 17개 목표와 62개 세부 지표들이 투명한 과정과 내실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직자의 적극적 의지와 함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도는 「충남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매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제5조)하고 매 2년마다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과 실적을 점검(제6조)하도록 했다. 또한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제10조)하고 거버넌스적 실행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제22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획의 수립과 실천, 그리고 점검 및 평가 절차를 거쳐 사업에 반영(제6조)할 수 있도록 선순환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평가 보고서(2020, 2022)에 따르면 2030년 목표 대비 진전이 있었던 지표는 41개(66.1%), 후퇴는 16개(25.8%), 변화가 없는 지표는 2~3개지표(3.2%), 그 외 4.8%는 데이터가 없어 측정이 불가하거나 현황지표인 경우다. (Goal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는 사회, 경제, 환경을 포괄하는 목표로 평가제외함) 물론 코로나19는 전반적으로 지속가능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일자리 감소와 경제의 하락으로 인해 SDG 2,3,8,10 목표가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사회 전반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

지자체의 SDGs 추진상 문제점으로 조직화, 제도화, 실행 및 평가의 3단계로 제시하거나 사회, 경제, 환경 분야별로 제시하거나 계획, 지표, 절차, 연계 등 과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충청남도 SDGs 2030의 17개 목표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62개 지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목표값이 적합한지를 재확인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 가능한지 살펴야 한다. 또한 담당 부서 공무원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중요하다. 둘째,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 활동가 등의 고루 참여하는 적극적·협력적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셋째, 세부지표 실행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존재와 이를 실행할 참여주체의 자발적 행동이 요구되며 도와 시 군의 참여조직간 연계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도전적 목표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담당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고 직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상호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 중간지원 조직, 지역의 핵심 참여주체(전문가, 사회단체, 활동가 등)가 각자의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혁신적 창의적 사고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범 국민적 확산을 위한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2018)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평가 연구 최종보고서(제1차, 2020)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이행평가 연구(제2차, 2022)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및 SDGs 반영방안(KEI, 2019)
- 지역단위 지속가능발전 추진실태 진단 : 충남13개 시 군을 대상으로(고경호, 2023)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의 인식 분석(황인성, 2015)

현안 연구



서울시 골드시티 주택공급과 연계한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밀라노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 밀라노 2030 계획과 밀라노 시티라이프

서울시 골드시티 주택공급과 연계한 충청남도의 대응전략

임준홍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혜선 | 충청남도 지역활성화투자사업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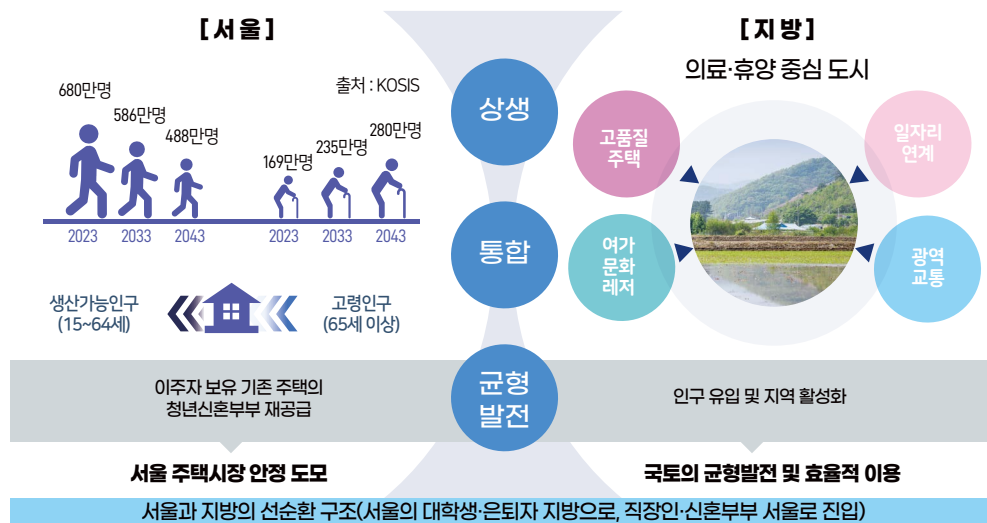
서울시의 '골드시티' 주택공급 사업은 급격한 고령화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과 지방 간의 인구 순환을 통해 두 지역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주거 모델이다. 이 사업은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 은퇴자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하며, 이주자들에게 주거뿐만 아니라 여가 및 일자리,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해 지방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재공급함으로써 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아직 성장하는 광역자치단체고, 천안과 아산 등 수도권 인접도시에서는 아직 인구가 성장하고 있지만 다른 많은 도시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즉, 우리나라는 물론 충청남도에는 이미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와 향후 인구가 감소할 도시만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서울시의 골드시티 사업은 충청남도에게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충청남도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자원을 최대로 활용해 골드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본 글은 서울시의 골드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충청남도가 준비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충남이 지역 소멸 위험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할지 제안한다.

서울시 골드시티 사업 특성 분석

골드시티 사업은 서울의 주택 문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순환형 주거 모델이다. 이 사업은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 및 수도권에 거주 은퇴자 등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서울의 기존 주택이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재공급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순환 구조는 서울과 지방 간의 상생을 촉진하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업 내용과 서울과 지방의 협력적 구조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강원도 삼척시에서 첫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충청남도 보령시에서도 유사한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청남도 보령시는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으로, 은퇴자와 청년층이 정착하기에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골드시티 사업을 통해 보령시에는 약 3,000가구 규모의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서울경제) (MTN NEWS).

충청남도의 여건 분석

아직 성장하고 있는 충청남도이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젊은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수도권과 인접하여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 접근성의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해안과 수변공간 등 자연경관과 많은 역사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시티 주거단지가 강조하는 풍부한 매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장하고 있는 천안시와 아산시 등은 향후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우수한 접근성 등의 매력으로 이주하는 계층을 적극 흡수하여 지역활력의 한 축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인구가 감소하는 많은 시·군에서는 우수한 경관자산,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지방소멸의 하나의 해법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미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보령시 역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으로, 서울시의 골드시티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충청남도는 지방 소멸 위험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활력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의 대응 전략

충청남도는 서울시의 골드시티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충청남도의 대응 전략을 기본적 대응 방향과 단계별 대응 전략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기본적 대응 방향

(1)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주거 모델 개발

충청남도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적합한 맞춤형 주거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천안시와 아산시 같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도시는 주거와 산업 단지를 연계한 복합 주거 모델을 도입하여, 서울에서 이주해 오는 은퇴자와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보령시와 같은 해안 지역은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은퇴자들이 여가와 휴양을 즐기며 정착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천안, 아산은 서울 및 수도권과 협력 상호교류에 기반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이주자 정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충청남도는 이주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정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이자 지원, 정착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지역 내 일자리 연계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3) 서울시의 골드시티 사업과 충남의 리브투게더 결합 모델 개발

충청남도는 서울시의 '골드시티' 사업과 민선8기 충청남도의 주택공급 정책인 '리브투게더' 주택공급 정책사업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리브투게더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생활하며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공동체 주택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의 골드시티와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에도 공통점이 많다. 이에 서울과 충남의 주택정책사업을 결합하여 충남 내 세대 공존형 주거 단지를 조성하면, 개별 세대의 이주는 물론 가족 단위의 이주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 빠르게 융화될 수 있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충남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계별 대응 전략

충청남도는 골드시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은 4단계에 걸친 추진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1) 1단계 : 사업 부지 선정 및 사업 효과성 검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충청남도 내에서 골드시티 주거 단지를 조성할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 해당 부지가 사업 추진에 적합한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천안시와 아산시 같은 수도권 접근성이 좋은 지역과 보령시 같은 해안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 주거 단지 후보지로 고려된다. 타당성 조사는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경제성, 환경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충남개발공사와 충청남도는 협력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 부지 선정에서는 이주하는 서울 시민의 입장 즉, 고객의 입장에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2단계 : 주택 건설 및 인프라 구축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로 주택을 건설하고, 이주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SH공사와 충남개발공사는 주택 건설을 주도하며, 천안시, 아산시 등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연계한 복합형 주거 단지를, 보령시 등은 경관자원, 관광 자원을 활용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 주거 단지에는 다세대 공동체 주택을 포함시켜, 세대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병원, 복지관, 체육 시설 등 생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해 이주자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호한 생활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지의 중요성을 한번 더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3) 3단계 : 이주자 모집 및 홍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주거 단지로 이주할 서울 시민들을 모집하고, 사업을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이 이루어진다. 충청남도는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 시민들이 충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이자 지원, 정착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천안시와 아산시의 교통 접근성, 보령시의 아름다운 해양 경관 등 충남의 매력을 적극 홍보하여 이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4단계 : 정착 지원 및 사후 관리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주자들이 새로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주거 단지 내에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주자들이 지역 사회에 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착 초기에는 생활비 보조, 주거비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후에는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모임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주민 만족도 조사, 지역 경제 활성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주거 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결론 및 정책 제언

충청남도는 서울시의 '골드시티' 사업을 도입해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주택 공급 모델을 개발하고, 이주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핵심은 충남도 내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천안시와 아산시처럼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인프라를 기반으로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보령시와 같은 해안 지역은 자연 경관을 최대한 활용해 은퇴자 및 청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충청남도는 서울시와의 협력 모델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은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주자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서울시와의 협력은 충청남도의 인구 문제 해결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충남도는 이를 기회로 삼아 지방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충청투데이(2024.07.19.), “보령시의 적극행정이 인구소멸 대응 위한 신호탄 골드시티 쏘아 올린다”
국회의원 이철규 외(2024.07.18.) “2024 지방소멸 대응 골드시티 정책포럼”
서울시(2024), “서울-지방상생형 순환주택사업 골드시티 추진(골드시티 설명자료)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연구

김용현 |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운영 현황

매년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역할과 기능 또한 이전의 시기보다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복지재단의 증가는 2010년 이후 설립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22년 3월 기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된 복지재단은 44개소로, 광역자치단체에 4개소(서울, 경기, 부산, 경북), 기초자치단체에 41개소가 있다. (신선웅, 2024). 충남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등, 3개의 복지재단이 있다.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은 사회서비스원 개소와 더불어 통합되어 그 숫자가 축소되었지만,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은 광역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재단 설립이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지방분권화와 지자체의 역할 증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분권화는 지역별 맞춤형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었다(충청남도, 2015).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사회적 인프라와 재정적 한계에 부딪힘에 따라 일부 지자체 사회복지재단의 설립 배경이 되었다(충청남도, 2015)

2.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강화

민·관 협력의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당면과제는 '어떻게 다양한

지역복지재단 설립 현황

구분		복지재단명	계
광역자치단체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부산복지개발원, 경북행복재단	4
기초 자치 단체	서울	강남복지재단,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구로희망복지재단, 노원교육복지재단, 동작복지재단, 양천사랑복지재단, 용산복지재단, 광진복지재단, 마포복지재단	9
	대구	달성복지재단	1
	인천	강화군복지재단, 옹진복지재단	2
	대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1
	경기	김포시복지재단, 시흥시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화성시사회복지재단, 남양주시복지재단	6
	강원	태백시복지재단	1
	충북	증평복지재단, 청주복지재단, 제천복지재단	3
	충남	당진시복지재단, 서산시복지재단,, 천안시복지재단	3
	전남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담양군복지재단, 목포복지재단, 신안복지재단, 완도행복복지재단, 장흥군나눔복지재단	6
	경북	김천복지재단, 영덕복지재단	2
	경남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김해시복지재단, 양산시복지재단, 진주시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 사천시복지·청소년복지재단	6
	계		40
합 계			44

출처 :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신선웅(2024)에서 수정

주체들과 민주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충청남도, 2015). 지역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민과 관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

3. 기초자치단체의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역할 강화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증가의 이유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중 복지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복지재단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역의 복지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아산시, 2018).

상기와 같이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의 복지재단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충남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복지재단 설립의 가능성과 장·단점 등을 짚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개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연기관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제 17조 또는 각 개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선이나 장학 또는 문화에 예술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을 실행하는 기관에 설립 및 운영 자금을 제공한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3).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에 필요한 자금(돈)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재단(財團)에 대해 알아보자. 재단(財團)은 "기증(寄贈) 및 유증(遺贈) 등과 같은 영속적인 재산을 근거로 하여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단체를 조직하여 개방성과 독립성 등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전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기부금 구축이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전문화되고 재도화된 자선을 실천하는 모험자본 성격을 갖는 기관"으로 정의되고 있다(신성웅, 2024).

우리나라의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 현실을 보았을 때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 독립적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 법률관계의 처리와 책임이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지재단이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여 다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법인이며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예산, 돈)을 내어 관련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통상적으로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신성웅, 2024).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의 가능성과 장단점 분석

1.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의 대표적인 장점

(1) 지역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최근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은 주민들의 복지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킹 강화

복지재단은 통합적인 정보제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들 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가능하다.

동일 사업영역 내에서의 민간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지역 내에서 다양한 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아직 부족한 현실에서 이러한 역할을 복지재단이 수행함으로써 민간기관 입장에서도 상이한 사업 기관 간의 중복적인 서비스 제공 예방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지역사회 민간·민관 네트워크의 강화 역할을 주축으로 수행함으로써 복지재단은 현 사회복지전달체계 상의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의 단점

(1) 예산의 문제

복지재단이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간 운영경비와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문정화 외, 2023). 대부분의 복지재단은 재단의 시설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문정화 외, 2023).

광역자치단체 복지재단의 경우 인력과 사업이 방대한 만큼 75억 원에서 5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14억 원에서 18억 원 정도 되고 있다 (문정화 외, 2023). 일반적으로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은 매년 17억에서 20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광산구, 2023). 복지재단의 운영은 이렇듯 상당한 기본자산 및 연간 운영비를 투입해야 하나 투입된 예산만큼 효과가 산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기초지자체 출연 복지재단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 복지재단 설립이 규모 있는 세금이 동원된다는 점에서 복지재단 설립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 등, 신중하게 검토해야 해야 한다. 매년 받아야 하는 시군과 의회의 감사도 재단설립 전 신중하게 고려해볼 사항이다.

(2) 타 사회복지 관계기관과의 기능 중복 및 옥상옥

다른 지역에서 복지재단 설립 당시와 설립 이후에도 재단설립을 통해 민간사회복지기관들과의 기능 및 역할 중복과 그에 따른 옥상옥(屋上屋)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다. 가령, 지역에서의 민간기부문화 활성화 및 민간재원 조성 및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지재단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복지재단의 설립은 민간 사회복지조직과의 기능과 역할중복이 우려된다.

(3)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기능과 설립 가능성 분석

평택복지재단 (2016)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핵심 역할은 모금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주 모금과 배분 기능이 가장 중시되고

있다. 손선옥 외(2017)도 복지재단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활동에 있다고 주장한다.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핵심 역할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금과 배분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모금 사업 이외에도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주 사업내용은 시설위탁운영과 연구이다. 기초지자체 출연 복지재단의 주요 기능별로 유형화하면 아래 표와 같다.

주요 기능에 따른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유형별 분류

시설수탁운영중심	모금 및 나눔 중심	연구중심
증평복지재단 가평군복지재단 서산시복지재단 당진시복지재단	천안시복지재단 가평군복지재단 서산시복지재단 당진시복지재단	청주복지재단 광진복지재단 창원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 화성시 복지재단

결론적으로 기초지자체 복지재단의 주요 세가지 기능 중 한 가지 기능이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복지재단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기능 모두 어렵다면 새롭게 복지재단을 신설하기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기존 사회 복지 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광산구. 2023. 광산복지재단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 계룡시. 2022. 계룡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김승권 외. 2012. 지역복지개발 평가센터 운영보고서
- 신성웅. 2024.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이란 무엇인가. 한국학술정보
- 아산시. 2018. 제4기 아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 문정화 외. 2023. 고양복지재단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
-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복지 재단 설립 연구

밀라노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전

: 밀라노 2030 계획과 밀라노 시티라이프¹⁾

제수진 | 충남연구원 연구원

이관률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홍 |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탈리아 밀라노시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킨 도시재생과 신도시 개발의 모습을 부여주고 있다. 본 글에서는 밀라노의 사례를 통해 내포신도시가 더 나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고자 한다. 밀라노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밀라노 2030 계획(The new PGT²⁾ Milano 2030과 밀라노 시티라이프 프로젝트(Milano CityLife Project)는 경제적 중심지로서 밀라노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밀라노 사례는 우리나라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밀라노 2030 계획

1. 배경과 목적

밀라노 2030 계획은 밀라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밀라노의 큰 꿈을 담고 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의 경제 중심지로, 끊임없는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한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밀라노 2030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1) 본 글은 내포신도시 관련 연구(내포신도시 그랜드비전과 실천전략) 선진사례조사(2024년 1월 31일 ~ 2024년 2월 7일) 인터뷰 내용과 수집자료 등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2) PGT는 "Piano di Governo del Territorio"의 약자로, 이탈리아에서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도시 및 지역계획을 의미한다.

Developer

CityLife SpA (Generali Group)

Masterplan Architects

Zaha Hadid, Arata Isozaki, Daniel Libeskind

Completion first phase of public park: 2013

Completion first office tower: 2015

Rules

Total area: 360.000 sqm

Av. Building Ratio: 1,15 sqm/sqm

Gross Floor Area: 289.000 sqm

Public areas for green and pedestrian spaces: minimum 50% of total area



밀라노 시티라이프의 토지이용
밀라노시정 제공
(<https://www.comune.milano.it/>)
(2024)

2. 주요 이슈와 특징

밀라노 2030 계획에는 세 가지 주요 이슈가 있다. 첫째는 경제발전의 혜택을 모든 연령층과 사회계층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밀라노의 경제발전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기회, 기술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로 포괄적 성장을 지향해야 했다. 이를 위해 부유한 지역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인프라, 교육, 커뮤니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셋째, 경제발전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추구해야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 기술을 촉진하고, 녹지 및 공공시설에 투자를 강화하며, 지속가능성을 우선시 하고 있다.

밀라노 시티라이프**1. 배경과 목적**

밀라노 시티라이프는 밀라노의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된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이고, 밀라노 2030 계획에서 핵심적 내용이다. 밀라노 시티라이프는 밀라노의 도시화와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밀라노 시티라이프의 주요 목적은 경제성장과 주거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대적이며 효율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밀라노는 유럽의 경제적 중심지로 기업들의 집중과 관련된 인구유입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주거와 상업 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밀라노 시티라이프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밀라노 시티라이프는 밀라노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총 면적은 약 110,715평(366,000㎡)이다. 밀라노 시티라이프는 주거, 상업, 레저 시설이 통합된 현대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밀라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밀라노 시티라이프의 전경 시티라이프 공식 홈페이지(<https://www.city-life.it/>)(2024)

2. 주요 이슈와 특징

개발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는 주거, 상업, 레저 시설의 통합, 교통 인프라 구축, 공원 및 녹지 공간 조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었다. 밀라노 시티라이프는 고밀도 주거 지역과 상업 지구가 조화롭게 배치되었고, 현대적인 건축과 친환경 기술이 도입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밀라노 도시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공하고, 경제적 번영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밀라노 시티라이프의 특징을 도시환경, 토지이용, 공원과 녹지공간, 주거의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밀라노 시티라이프는 주거, 상업, 레저 시설이 통합된 현대적인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르고, 그 사이 사이에는 다양한 주거 유형이 배치되어 있다. 상업 지구에서는 현대적인 쇼핑몰, 레스토랑, 여가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다. 둘째, 밀라노 시티라이프의 토지이용은 매우 효율적이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밀라노 도심과 원활한 연결을 위한 도로와 대중교통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특히 지하철, 버스,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 단지 내외의 이동이 편리하다. 셋째, 밀라노 시티라이프는 공원과 녹지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다. 밀라노에서 가장 큰 보행자 지역을 보유하고 있고, 170,000m²의 대규모 공원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도시 전체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시티라이프의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은 여유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밀라노 시티라이프의 주택단지 계획은 매우 체계적이다. 다양한 주거 유형이 제공되고 있고, 건물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고 빌딩과 아파트 사이에 중앙공원을 배치하여 평온하고 활동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이 도입되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열조절 방사 천장, 첨단 단열재, 옥상부 태양광 시설 설치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밀라노 2030 계획 밀라노시청 제공(<https://www.comune.milano.it/>)(2024)

시사점

밀라노 2030 계획과 밀라노 시티라이프는 내포신도시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밀라노의 2개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계획적 측면, 절차적 측면, 디자인적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적 측면에서 밀라노의 2개 사례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다시 각인시킨다. 밀라노 2030 계획의 주요 이슈와 특징을 참고하여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신도시 계획에서 경제적 번영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시민 참여 등 절차적 측면에서 밀라노의 2개 사례는 시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했다. 향후 도시계획과 신도시 계획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디자인 측면에서 밀라노 시티라이프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고밀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향후 내포신도시 확장 설계 등에서도 다양한 주거유형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심과 원활한 연결을 위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원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밀라노 2030과 밀라노 시티라이프는 새로운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프로젝트, 신도시 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경제적 중심지로서 밀라노는 도시계획을 통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향후 내포신도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밀라노 사례의 시사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열린 마당



여성가족부 폐지 자장(磁場) 속
충남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 변화와 우려

여성가족부 폐지 자장(磁場) 속 충남 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의 변화와 우려

이선화 | 천안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여성정책 담당기구 현황 및 역할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는 여성과 가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부서는 여성의 권리와 평등, 가정 폭력 예방, 성평등 교육 등을 총괄하며, 여성과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을 한다.

충청남도도 여성과 가족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여성정책관실을 두고 있다. 이 부서는 여성과 가족의 복지, 권리 보호, 폭력 예방, 다문화, 청소년, 양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몇 가지 주요한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여성정책 : 여성정책 수립 및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 확대, 유관순상 시상제도 운영, 양성평등 비전 실행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 조정
2. 가족정책 : 가족지원 정책 총괄, 한부모가족 복지 및 시설 지원,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등
3. 다문화 및 외국인주민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외국인주민 사회통합정책 수립과 추진, 다문화 어울림사업 등을 총괄
4. 청소년정책 : 청소년 정책 기획 및 홍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충청남도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제2차 충청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과 가족 지원 : 여성과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
2.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
3. 지역특화 일자리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
4. 여성폭력 근절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
5. 다문화 지원 :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와 여성정책의 후퇴

2022년 1월 7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sns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문구를 올리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공식화했다. 당선된 후, 인수위원회 구성기자회견에서 여가부 폐지 관련 질문에 “(여가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답변하며 폐지를 재확인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사회적약자 취약계층 보호를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을 5대 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정책 역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을 고수하며 장애청소년 성인권교육, 젠더폭력 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의료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운영 등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삭감’ 하였다.

해당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예산 삭감 이유로 “지원실적 반영, 사업 효율화, 운영방식 일원화”를 말했다. 그러나 국가는 차별 폭력 피해자 지원을 수치에 기반한 실적 평가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방안을 찾고, 지원체계에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들어선지 2년을 넘어서 지금, 여성가족부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 예산 삭감, 정부 정책에서의 '여성'지우기 가속화 등 여성 성평등 정책은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다. 2024년 2월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고, 후임 장관후보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가조작, 배임의혹 등 자격 논란이 불거져 자진 사퇴 한 후, 지금까지 후임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 출신의 인구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국장)을 신임 기획조정실장으로 발령하는 등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책을 발표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특히 UN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제9차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 해당 내용 철회와 여성가족부 장관 즉시 임명을 권고했다.

여가부 폐지 자장(磁場) 속 충남의 여성 성평등 정책

1. 전담부서 위상 격하 또는 조정
2. 조직 이름에서 '여성' 삭제
3. '효율'과 '예산 절감' 미명 하에 정책 연구기능 축소 약화

윤석열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자장(磁場) 안에서 출범한 민선 8기 광역자치단체 성평등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변화 특징을 요약하면 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강원, 대전, 경북, 제주 등에서 조직명에 '여성'이 빠지거나 전담부서의 위상이 격하되는 등의 변화가 포착되었다. 충남도의 전담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민선7기(2022년)와 비교해 외형상 조직명칭과 위치의 변화는 없다. 그러나 세부조직 구성에서 정책의 축소 또는 약화를 의미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양성평등정책팀이 없어지고, 가족다문화정책팀이 가족정책팀과 다문화외국인주민팀으로 확대 분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충남양성평등비전 2030 실행과제"는 자취를 감췄고,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경제활동 촉진 정책도 가족정책팀으로 옮겨지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영역이 가족정책의 하위 단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또, 충남도가 추진한 공공기관효율화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과 여성가족연구원 세 개의 조직을 통합하여 '충남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이 2023년 출범하였다. 여성가족연구원은 그 안에서 '여성가족연구본부'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전과 비교하여 대부분의 교육사업이 폐지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충남형 폭력피해 통합상담소'의 추진과 우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4년 6월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형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를 통합하여 '통합상담소'로 지정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조례 제정 이유로 들고 있다.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 현재 폭력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 시설은 폭력 유형별로 분리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음 (2024년 1월 기준 총 인구 2,130,509명, 폭력피해자 지원·보호시설 총 38개소)
- 가장 대표적인 폭력유형인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일부 시·군에는 둘 중 한 개 유형의 상담소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유형 세분화로 인해 상담소 명칭과 연락처가 모두 상이하고 각 시설에 대한 인지도도 높지 않아 정작 긴급한 지원·보호가 필요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접근성이 낮아 적절한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폭력유형이 점차 복합피해(가정폭력+성폭력+신종폭력 등) 양상으로 급변하면서 실제로도 상담소 간 기능통합이 요구되고 있기에, 기존의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합상담소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지정 및 운영 활성화 조례 발의안 2024.2.21]

도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하여 충남형 통합상담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나눠서 운영해 온 상담소 사업을 통합하고,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무분석을 통해 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충남 여성복지시설협의회는 통합상담소 체계 구축(안)에 대한 간담회 및 의견서를 통해 현장의 우려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다.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체계 구축(안)

통합 추진 방안

1. 기관 간 통합 방안

- ① A기관과 B기관 간 흡수 통합 후, 통합상담소 지정
- ② 제3의 법인으로 통합 후, 통합상담소 지정
- ③ 통합상담소 전환에 동의한 상담소만 통합상담소
- ④ 기존 상담소를 특화상담소(이주여성및장애)로 전환하여 통합상담소 지정
- ⑤ 물리적 통합없이 통합상담소만 지정
- ⑥ 통합상담소로 미 지정
 - 국비 및 도비의 예산 삭감 시, 우선 적용/시설 운영평가 반영

2. 조직 및 인력 통합과 지원 방안

- ① 조직 및 인력 통합 원칙
 - 지역별 개소수를 통합하여 지역별 1개소 이상 운영을 원칙

→ 통합한 상담소의 공간적 통합

② A기관과 B기관 간 흡수 통합 및 제3의 법인으로 통합

→ 2개의 상담소를 충남형 통합상담소로 지정한 후 조직 개편 추진

③ 통합에 동의한 상담소의 통합상담소 지정 및 특화상담소로 전환

④ 물리적 통합없이 통합상담소로만 지정

⑤ 상담원 자격기준 충족

3. 충남의 통합상담소 명칭 브랜딩

① 현재는 시군별·시설별로 신고된 명칭으로 상담소 운영

② 동일한 상담소 명칭 앞에 지역명을 붙이는 방식

→ ex. 천안시 북부 및 남부, 아산시 서부

③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분원 형태의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방식

4. 충남 공통전화번호 시스템 구축

① 지자체 예산 투입 통한 자체번호 구축 : 예 1588-1366

② 내담자의 접근성 향상 및 선택권 확대

③ 전국 공통번호 및 자동연결 시스템

5. 충남 업무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① 상담일지 및 사례관리 시스템화

② 결재 관리 시스템화 - 현재 사회복지시스템 및 행복이음 사용 중

③ 근태관리 시스템화

6. 인센티브

① 인력 및 인건비 지원

→ 국비지원 통합상담소 공모 미선정 상담소의 인건비 지원

→ 기관 간 통합한 상담소에 대한 인건비 확보 : 국·도비 예산삭감으로 인한 인건비 축소
예상, 통합 상담소 인건비 우선 확보 지원

7. 시설 평가

① 컨설팅 및 평가체계 도입

→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고도화를 위한 평가 도입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 서비스 질 향상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컨설팅 및 페널티 적용

→ 평가의 방점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고도화

→ 평가 결과에 대해 통합상담소 지정 시설과 미지정 시설 간 페널티 분리 적용

→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영역을 고려한 평가지표 설정

· 추진계획

1. 단계별 추진 계획 : 3년간 5단계에 걸쳐 통합상담체계 구축

2. 서비스 질 제고 : 컨설팅 → 운영평가(가평가) → 컨설팅 재실시 → 운영평가

3. 추진 및 완료시점 : 2024년 하반기 추진 → 2026년 하반기 완료

1단계 준비	2단계 도입	3단계 적용	4단계 개선	5단계 실행
2024.6.-2024.12.	2025.1-2025.6.	2025.6-2025.12	2026.1-2026.6	2026.6.-2026.12
평가지표 개발 시설명칭 변경 전화번호 동일 전산시스템 구축 지원방안 마련	컨설팅단 구성 컨설팅 실시 전화번호 통일 전산시스템 적용 통합상담소 지원 상담소 통합지원	가평가 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규정 마련 상담소 통합지원	평가지표 보완 컨설팅 재실시 상담소 통합 지원	운영평가 제도 도입 상담소 통합지원

[충청남도 폭력피해 통합상담체계 구축 연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스토킹, 이주, 장애, 긴급지원, 위기개입은 서로 지원 방법이 다르지만 젠더이슈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있다. 한편 서로 닮아있음에도 그 개입방법과 특성이 서로 달라, 폭력피해는 세분화되어 특화된 상담소로 운영해야 하며, 각 대응현장에 대한 상호 이해를 통해 서로 배우고 연대하는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여성폭력의 지원체계를 단단하고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통합이 아닌 기능적 통합으로 당사자가 스스로 폭력으로부터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이 확대 되어야 한다.

성폭력의 근절과 피해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에는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통합상담체계 구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담소 운영 주체들과 활동가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성폭력에 대한 관점 부재, 정책의 부재, 예산까지 부족한 현실에서 당사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고, 이미 결정되었으니 진행될 것이며, 따르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통보에 가까운 결과를 듣는다면 그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폭력피해자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이며 출산율은 말할 것도 없다. 국민들의 심리·정서적 문제가 다방면으로 드러나고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까지 젠더기반 폭력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상담소를 줄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차별 폭력 피해자 지원은 지원실적, 사업 효율, 운영방식 일원화 등 수치를 기반으로 한 관점만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통합전환에 따른 우려,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한다. 당사자와 현장의 문제제기가 크다면 원점 재검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충남은 통합상담체계 구축 연구가 진행되었고 관련 조례도 제정되었으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 중에 있다. 충남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의 회복과 지원을 중심에 두고 고민할 것을 기대한다.

이
본
남
론
라
언
바
충



스마트 축산단지와 청양 지천댐



스마트 축산단지와 청양 지천댐

권혁조 | 충청투데이 기자

민선 8기 힘썌충남은 충남의 100년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해 농업농촌재구조화, 탄소중립경제,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을 3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중 농업농촌구조개혁은 농어업, 축산업 등 전통적인 1차산업도 누구나 연소득 5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고, 양복 입고 출근해 양복입고 퇴근하는 스마트한 산업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김 지사의 바람은 이미 지난 7월 한차례 무너졌다. 당진 석문 간척지를 중심으로 조성하려던 스마트 축산단지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취재과정에서 축산단지 조성을 반대했던 측은 “돼지우리가 어떻게 냄새가 안 날 수가 있느냐, 집 앞에 가축 분뇨가 흐른다면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대답했다.

이들의 말처럼 내 집 앞에 축사가 만들어져 냄새가 나고, 분뇨 토사물이 흐른다면 누구나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당진 주민들뿐 아니라 김태흠 지사였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김 지사가 그렸던 축산단지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옛날 할머니댁의 돼지우리가 절대 아니다.

그가 계획했던 축산단지는 ICT를 기반으로 축사에서 생산 도축 육가공 등 전 과정을 원스톱화하고, 방역은 물론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해 탄소절감까지 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시설이다.

사람은 누구나 보고, 경험한 일들만 사실로 믿기 때문에 김 지사의 공약을 의심하고, 축산단지를 반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이에 김 지사는 마을 대표들이 견학도 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며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날로 심해지는 반대 여론에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로부터 한 달쯤 후 해외취재가 있어 중국에 갔다.

중국에 가기 전 목적지 부근인 광저우 난사 개발구라는 곳에 스마트 축산단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취재 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도 아니었지만 일부러 그곳을 찾았다.

김 지사의 얘기는 허언이 아니었다.

겉모습은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빌딩과 같은 광저우의 한 축산단지는 그곳이 축산단지라는 설명이 없었으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당연히 건물 주위에서 냄새가 나거나 가축 분뇨가 흐르지도 않았다. 나무나 식물들도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었다.

방역 원칙상 한 번 축사에 들어가면 몇 일씩 못 나오고, 외부인은 철저히 출입에 제한을 두는 탓에 단지 안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나 국민성이 낮고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인가, 믿기 힘들었던 '꿈의 축산단지'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김 지사의 말처럼 마을 대표 몇 분이라도 견학도 하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대화와 소통을 했더라면 우리나라 축산업과 당진의 미래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충남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 청양 지천이 환경부의 기후위기대응범 후보지(안)으로 발표된 이후 지역 안팎의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내 주장만이 모두 옳은 것처럼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주민과의 대화는 아수라장이 됐고, 환경부의 설명회는 열리지도 못했다.

설명회를 듣기 위해 행사장을 찾은 이들의 정당한 알 권리조차 앗아갔다.

누구나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설명은 들어 본 뒤 사실에 입각한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하고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집단행동이나 물리력을 동원해 실력을 행사할 경우 명분도 사라진다.

청양의 물을 서산, 당진에서 이용하는 게 잘못이라면 대청댐, 보령댐의 물도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잘못된 일이다. 특히 청양·부여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3년 연속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는 아픔을 겪었다.

충남은 물이 부족해 가뭄 피해도 수차례 나타났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로 이런 피해는 더 잦아질 것이다.

댐 건설로 인한 장 단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논의한 뒤에 반대해도 늦지 않다. 더 이상은 축산단지의 아쉬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로컬이
답이다



충남의 대표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주)로컬몬스터

충남의 대표 유니콘 기업을 꿈꾸며..

이재영 | (주)로컬몬스터 대표



(주)로컬몬스터라는 사명이 임팩트 있고 개성이 강한 것 같은데, 로컬몬스터라고 사명을 정한 이유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로컬몬스터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회사 이름에 '청양'이 포함된 청양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사업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충남 청양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로컬몬스터'라는 사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격식있는 회사보다는, 누구나 편하게 기억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굴려서 확정하게 된 사명이고, 지금은 상표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청양에서 태어나고 타 지역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다가 로컬몬스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청양으로 돌아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저는 첫 커리어를 IT기업(SK텔레콤)에서 시작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처음으로 전국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게 되었는데, 대전에서 장애인 스포츠 기업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기업이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또한 균형있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인 청양으로 내려와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컬몬스터는 충남도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써, 인구소멸지역인 우리 지역(청양)을 위해 청년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Q3

SNS 및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충남의 알프스 '청양'을 중심으로 '청년마을,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및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데, 주요 사업 및 프로젝트들을 소개 부탁한다.

2021년에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꾸준히 외부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사업의 주관부서나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궁극적으로는 청년인구 유입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살고 일하고 있는 청양군은 충청남도에서도 인구가 가장 적고(2만 9천여 명), 심지어 고령화율도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을 활기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022년부터는 행정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우승한 팀과 사업에 관해 잠깐 소개드리자면, 21년에는 청양고추 모양을 한 베이커리업체가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22년에는 천연비누업체가 청양의 농산물로 천연비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23년에는 청양의 나물을 활용한 나물밀키트 업체, 24년에는 청양의 구기자를 활용하여 막걸리를 제조 생산한 업체가 판매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Q4

충남을 비롯한 모든 지자체는 지역 내 인구유입,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컬몬스터가 추진한 사업으로 기반시설확충,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 기존과 다르게 청양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는지 궁금하다.

청년을 지역에 유입시키려고 보니 3가지의 기본 요건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소득), 주거, 그리고 관계(네트워크)였습니다. 청년의 감성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봤지만, 현실적으로 외지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행정 및 민간기관들과 열심히 협력하여 청년을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찾아나섰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로 청년창업경진대회를 만들었고, 올해로 벌써 3회차를 맞았습니다. 대회를 통해 발굴된 앞서 소개해 드린 청년기업들 중 청양고추빵 업체는 연매출 1억도 돌파하고, 지역에서 잘 정착해 든든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이 큰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 같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하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충청남도의 청년기업을 위한 극복 노하우가 궁금하다.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항상 가장 어렵고, 한편으론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외지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 숙식을 제공하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다보면, 지역민들은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에 서운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지역 발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업 과정에 청양군 지역민을 참여시키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들로 인해 보람되고 성취감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로컬몬스터는 주민기업의 브랜딩과 마케팅 과정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창업한 로컬기업들은, 제품 자체는 훌륭하지만 자기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포지셔닝하고, 판매하는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로컬몬스터를 만난 주민기업들이 자기 정의를 확실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매출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한 프로젝트들이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로 소개될 때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충남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자 사업체의 대표로서 현재 충남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로컬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는, 수도권에서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지방에서는 직원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는 일자리를 찾는 도시 청년들에게 지자체와 연계하여 비용 등 지원을 통해 로컬기업에서 단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청양군의 매력과 청년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 및 프로젝트 계획과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건 있지만, 아직은 비밀입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지역의 여러 사회적약자를 도울 수 있는 공공형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내려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 아이가 살아갈 다음 세대에 청양군이 소멸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에 청양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실현하고, 동료 창업가들을 계속해서 발굴해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최종목표라고 한다면, 청양군에서 단순히 농업 관련 사업이나 지역내에서 소비하는 사업이 아닌 IT 분야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청양군 지역내 청년을 많이 고용하고, 그로 인해 외부에서 청양군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충청남도의 청년기업인으로써 충청남도과 청양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실 청양군은 청년이 활동하는 데 있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바란다면 욕심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과 청양군에 한 가지 부탁을 한다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아플 때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청양에는 산부인과도, 소아과도 없어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제2의 (주)로컬몬스터를 꿈꾸는 충남의 청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요즘 균형발전, 인구소멸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로컬에 대한 허황된 꿈, 이상한 환상을 가지고 준비없이 선불리 지역에 내려오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제가 먼저 로컬에 정착해보니, 생각보다 이 곳은 더 치열하고, 때로는 생존에 문제에 있어서 불안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컬창업을 꿈꾸는 또래 청년들에게 항상 '나름'이 아닌 '다름'으로 싸우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기반으로, 대체불가능한 브랜드가 될 수 있어야만 로컬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청양이 궁금하다면, 그리고 (주)로컬몬스터가 궁금하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소식



“충청남도, K-국방의 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할 터”
충남연구원, KTX공주역 활성화 토론회 열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성료
충남도 스마트팜 R&D 및 산업 육성 전략 모색

연구원
소식 1

“충청남도, K-국방의 전략수도로 자리매김할 터”

8월 17일, 서울 코엑스서 ‘2024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 개최

충남연구원은 8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K-국방의 전략수도, 힘센 충남”을 주제로 「2024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 「충남 국방산업 육성 포럼」(이하 ‘충남국방포럼’)은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여 충남도 국방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 표명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전문가 토론회다.

이번 포럼을 통해 충남도의 국가공모사업 등에 대한 유치 타당성 확보 방안, 군의 실제 전력수요와 충남지역 특성을 고려한 충남도의 국방산업 발전 방안을 방산 수요의 주체인 군(軍)과 체계기업을 포함한 산·학·연·군·관의 국방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모색했다.

주제발표는 ▲ 충남 국방특화 클러스터 추진전략 - 논산 국방국가산단을 중심으로(논산시), ▲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개요 및 충남도 유치 필요성(충남연구원), ▲ 충남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의 의의 및 시사점(ADD), ▲ 충청권 로봇 산업 실태 및 시사점(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 K-국방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대학 건양대의 비전과 추진전략(건양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어 종합토론에는 신치범 건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종진 LIG넥스원(주) 부사장, 박장현 충남국방벤처센터장, 조재봉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 과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형식 정부부지사는 내년 공모에 도전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를 강조한 뒤 “논산 국방국가산단 조성,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지원, 계룡군문화축제와 연계한 국제 방위산업전시회(카덱스) 개최 등을 통해 충남을 국방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용준 충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본 포럼이 충남도 민선 8기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특화 클러스터 사업의 실효성 있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추진 방향성을 확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와 논산시, 계룡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금번 포럼은 국방부·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한국무인 이동체연구조합 등이 개최하는 2024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했다.



연구원
소식 2

충남연구원, KTX공주역 활성화 토론회 열어

공주·논산·부여, KTX공주역 활성화 맞손... 협약 체결

충남연구원은 8월 13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KTX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주시와 논산시, 부여군은 KTX 공주역 활성화를 다짐하며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백성현 논산시장과 박정현 부여군수 그리고 충남도청, 코레일,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3개 지자체는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주역 이용 활성화와 교통수요 확대를 연계한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통해 충남 남부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 공주역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제 마련 ▲ 공주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망 개선 방안 강구 ▲ 공주역을 이용한 협약기관 간 공동경제권 형성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신도심과 공주·논산·부여 등 인근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세종~KTX공주역~탄천 연결도로' 통과를 함께 기원했다.

이 사업은 세종시 장군면에서 공주시 반포면 마암(청벽)을 거쳐 KTX공주역, 탄천면(삼각리)을 잇는 총연장 23.5km,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2029년까지 436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도로가 개통되면 KTX공주역에서 세종시까지 이동 거리가 32.9km에서 25.3km로 줄어들고, 이동 시간도 40분에서 25분으로 15분 단축될 전망이다.

공주 청벽대교 옆에 금강 횡단 교량을 신설해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서 세종 남부권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고, 호남권에서 KTX를 이용해 세종을 방문할 경우 공주역에서 내려 이동하는 새로운 교통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지자체는 '공주역 이용 활성화'를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충남 남부권의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교통망 개선과 산업기반시설 구축 등 지자체간 공동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충남연구원 주재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공주역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공주역 이용률 부진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일 이용객 2천명 목표 달성을 위해 3개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시장은 "그동안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공주 테마역 조성사업, 대중교통 증편, 시티투어 운영, 문화관광 시민 이용 공간 정비사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왔으나 위치적 한계와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3개 지자체가 충남 남부권의 유일한 고속철도역인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한 만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원
소식 3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성료

지난 6월부터 약 3개월간 주민참여 교육...성과 공유회 가져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는 충청도민의 공공디자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마무리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도내 4개 지자체(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졌다. 이번 교육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를 기반으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공공디자인센터는 지난 8월 23일 충남도서관에서 이번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성과공유회를 갖게 된 것.

이날 발표된 주요 성과를 보면, 아산시는 온양온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보행안전을 위한 안전시설(횡단보도, 안내사인 등) 설치,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논산시는 시청 일대의 차량, 킥보드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당진시는 서문공원 일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안전을 위한 등하굣길 조성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보행친화도로 조성을, 홍성군은 천태리 마을회관 일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친화도로 및 포켓공원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번 아카데미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디자인 교육 프로그램과 우리 지역의 문제 해결방법 등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오병찬 공공디자인센터장은 “지역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로 도출된 이번 성과물은 향후 국가 및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충청남도의회, 당진시의회, 충청남도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센터 관계자는 물론,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참가 주민 등 약 70여 명이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원
소식 4

충남도 스마트팜 R&D 및 산업 육성 전략 모색

‘제26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개최...

충청남도 스마트팜 R&D 및 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충청남도과 충남연구원은 8월 28일 천안 오엔시티호텔에서 ‘제26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일명 씨앗포럼)’을 개최했다.

씨앗포럼은 충남도의 현안 이슈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과학기술 관련 지역의 민·관·산·학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 4회 개최되고 있다.

‘충남도 스마트 농기자재 시설 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스마트농업 관련 민·관·산·학의 전문가 40여 명이 모여 열린 토론을 벌였다. 발표에 나선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김경철 농업연구사는 농작물의 생식 성장 인식 및 판단을 도와주는 모니터링 로봇 등 스마트팜 로봇 연구개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남규철 스마트농업진흥팀장은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스마트농업 구매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해 보급 기회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주대 스마트팜공학과 김락우 교수는 ‘충남형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이라는 신규 R&D 사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충남도는 전국 경작지 면적 3위, 수도권 제외 전국 시설 작물 재배 면적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스마트팜 시설 산업 육성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라며 “도내 스마트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 모듈화 ▲ 설치 운영비 산정 ▲ 스마트팜 생육 운영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합 지원·관리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스마트팜 다여기있슈(가칭)’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충남연구원 최창규 정책기획부장의 진행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천근녕 연구원, (주)그린플러스 정순목 팀장, 충청남도 김운석 미래산업정책팀장 등이 참석해 충남도 스마트 농기자재 시설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을 논의했다. 한편, 충남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기회삼아 올해 연말까지 스마트 농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충남도의 특색을 살린 스마트 농기자재 시설 산업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 산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충남
리포트
플러스



서산 석유화학 첨단소재 특화
국가산업단지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김양중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kyl0509@cni.re.kr



충청남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추진방안
이민정·전춘복 |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원
minjung1006@cni.re.kr

인포
그래픽



전국최초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제작을 통한
충남의 해양쓰레기 제로화 : 한걸음 더 앞으로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윤종주 센터장
이상우 연구원·송혜영 연구원



온라인거래 활성화가 충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수현 연구원·신동호 선임연구위원

정책
지도



마을소멸지수를 적용한
농촌마을(행정리) 소멸 실태 및 정책과제
윤정미 선임연구위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비 위축과 관광객 유치의
상쇄 효과
한석호 초빙책임연구원·김보람 연구원



QR코드를 스캔하면 YouTube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CNI 정책연구 플랫폼 채널로 연결됩니다.

열린충남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http://www.cni.re.kr>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
본 인쇄물은 재활용 가능한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